

■ '세속 자치' 언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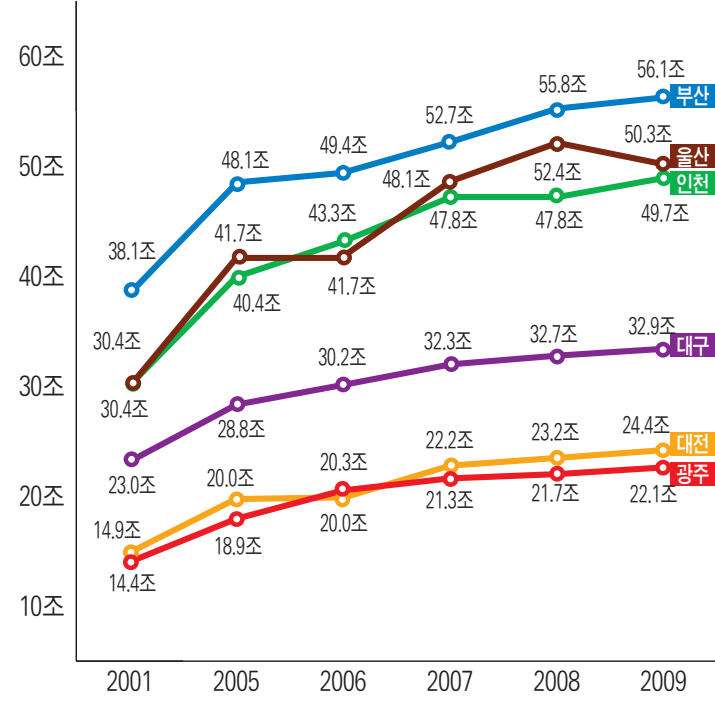
④ 고착되는 지역불균형

특정 지역에만 일방 지원 이제그만 공정경쟁 통해 균형발전 이끌어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입법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력을 틀어쥐고 국가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및 사업의 투자규모나 입지가 편향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다 그러한 추이가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발전을 유도하는 선진국의 국가·지역 간 관계 설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 및 재정 이양이 필수다.

■ 6대 광역시 2001~2009년 지역내총생산 추이



지역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지역 내 총생산(GDP)이다. 중앙정부가 수조원의 전문화된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기업 유치, 인재 유입, 지역경제 발전 등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GRDP의 추이를 살펴보면 간접적이거나 그 간 중앙정부의 투자 편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26일 광주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시의 GRDP는 지난 2001년 14조4000억원에서 지난 2009년 22조1000억원으로 8년간 7조7000억원이 늘었다(그래픽 참조).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광주 GRDP는 여전히 6대 광역시 중 6위다.

반면 이 기간 다른 광역시의 GRDP를 살펴보면 부산은 38조1000억원에서 56조1000억원으로 18조, 대구는 23조원에서 32조9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대전은 14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울산은 30조4000억원에서 50조3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수도권 인구는 30조4000억원에서 49조7000억원으로, 특별시인 서울은 163조9000억원에서 257조4000억원으로 각각 19조3000억원과 93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650조2000억원에서 1066조원으로 415조8000억원이 늘었다. 광역·특별시의 증가분은 177조8000억원(42.8%)으로 이중 수도권 인원과 서울이 63.4%(112조8000억원), 영남권인 부산·대구·울산이 26.9%(47조8000억원) 등 90.3%를 차지했다.

인구와 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에 중앙정부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집중이 집중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15조4000억원 중 영산강에는 1조6000억원이 배정된 반면 낙동강에는 9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액 역시 대전 2조3000억원, 대구 등 1조5000억원인데 광주 6000억원에 불과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광주는 끼지도 못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이 이러한 격차를 고착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GRDP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1인당 GRDP는 1372만9000원에서 814만1000원이 올라 2187만원이 됐지만 광주는 1024만7000원에서 고착 497만6000원이 상승, 1522만3000원이 돼 오히려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01년에는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348만2000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그 2배에 육박하는 664만7000원이 됐다. 광주에 대한 투자가 전국 평균보다 적고 이것이 결국 지역민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01년만 해도 광주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부산은 1026만1000원에서 1609만원으로, 대전은 1054만8000원에서 1620만6000원으로 각각 582만9000원, 565만8000원이, 울산은 2001년 2903만6000원에서 4622만9000원으로 무려 1719만3000원 상승했다.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투자에 목을 뿔 수밖에 없는 것이 그에 따라 지역의 발전 정도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정과 권한으로 특정지역에 수혜를 베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갈등 부른 국책사업 편파배정 파헤친다

민주 특위 공식 활동 돌입
과학벨트·NH 등 3개 분과
위원장에 천정배 최고위원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선정·동남권신공항 건설·NH공사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민주당 3대 국책사업의혹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이하 국책사업특위)가 26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국책사업특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위원(현재 23명)을 확정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분과위로 위원들을 배분했으나 이날 참석자 부족으로 충분한 의견결집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특위 위원 23명 중 광주·전남의원은 김영진·김재준·조영택의 등 3명이며 이들 모두 과학비즈니스벨트 분과에 소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만 참석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결정되면서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국론이 분열되고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됐다"며 "우리 특



광주·전남 청정 축산 선포
광주축산농협 등 광주·전남지역 19개 축협조합은 26일 오후 축산농가와 소비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우고기 소비촉진 거리 행진을 한 뒤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청정축산 선포식을 했다. 선포식에서 축산농가들은 친환경·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청정축산' 구현을 다짐하고 풍선을 날리며 한우 소비 확대를 기원했다.

위가 앞장서서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어떤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 낱알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중달(오월 중에 탈자) 운운하는 대통령과 참모진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국책사업이 정부의 무원칙·오락가락·주먹구구식 행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와악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일점 재검토' 발언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다가 뒤통수를 때렸다"며 "과학벨트 유치 경쟁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국책사업이 정부의 무원칙·오락가락·주먹구구식 행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와악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LH공사이전에 대해 "지난 2009년 'LH통합공사법' 심의 때 했던 분산배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전국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다"며 "전북 주민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면피하기 위한 전략적 밀실결정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3가지 국책사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과위 별로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4대강, 그만두고 매물지나 찾으세요

특별수사청 설치 없던일로

국회 사개특위 내달 종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조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 내부의 이견으로 후퇴한 것이어서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사개특위 한나라당측 일부 위원들은 25일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점 개혁안을 처리하고 이를 양대 정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한 뒤 예정대로 6월말로 사개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위원은 26일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설치하는 여론의 지지를 못받고 있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 모색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특인 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예정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합의의 깨고 특수청 설치 등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비정점 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혁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